

社 說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 제45회 학위수여식에 부쳐

또 하나의 마무리가 한창인 계절이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진부한 말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학문하는 사람에서 생활인으로,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환골탈태하는 이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일 것이다.

돌아보면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회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의 대가가 오늘의 영광스러운 학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옥과도 같은 입시전쟁을 이기고 자랑스러운 경희인이 된 이후로 어떤 이는 4년, 또 어떤 이는 십 수년 간의 학교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은 실로 감회어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학문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뼈를 깎는 듯한 고뇌와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왔을 것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축하의 말과 축하를 전하고 싶다.

이제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은 그간 우리가 공부하고 고민해 온 사회의 한 가운데다. 때로는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깊은 좌절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성취감과 희열을 맛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풋풋한 생기가 온 사회에 전해지기 바란다. 대학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가졌던 이상의 나라를 온전히 펼쳐가는 모습을 남아있는 선생님과 후배들은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이성과 지칠 줄 모르는 도전의식만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지녀왔던 정열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비로소 인간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우뚝 서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시련은 결코 좌절이나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연마의 마당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여러분이 보다 완성된 사회인으로 거듭어제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제 동문용을 나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대들처럼 자랑스러운 경희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안보가 안기부의 거름되지 말아야

개정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국회로 되돌아 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북한에서 일가 죽어 귀순하였고, 최고위층인 황장엽씨가 망명요청을 해오기도 하였다. 한쪽에서는 귀순했던 사람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런 사건을 두고 정부일각에서는 간첩검거를 앞세워 이른바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욱이 황장엽씨의 간첩 4~5만명설은 이런 분위기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최근의 '안보태세 강화'라는 구호 아래 안기부법을 덤으로 실어 두리틀실 넘어가려는 의도이다. 안보를 내세운 공안판파가 몰아치면 우리 사회가 경직되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논의의 장도 닫힐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안기부법이 이대로 굳어져버리게 되면 그 무소불위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 뻔히 보인다. 이번 귀순자 피살사건 수사에서만 보더라도 안기부는 처음부터 공조체제를 무시하고 경찰을 제한한 수사를 독점하여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안기부법이 유아무야 넘어가 안기부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될때의 결과는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하자면 안보의식 강화라는 주장이 바로 안기부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게 하자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안보의식이라는 것이 국민 스스로 위기감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어느 한 집단이 말아서도 안되고 사회를 얼어붙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안보태세가 강화되기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마비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안보강화와 안기부강화가 동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것들이 사회의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일은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 따뜻한 봄기운에 칼바람이 불어올까 염려되는 것이다.

시론

권력형 비리수사 계속 제자리인가

정경유착과 로비의 '천국'

부실한 권력실체 조사가 재발가능성 예고

뇌물제공자 가벼운 형벌제도 재고해야

김 용 섭

〈법학과 교수·변호사〉

한보사태는 권력형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비리의 규모면이나 정경유착의 정도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수사를 통한 불철저한 진실규명에 있어서도 그렇다. 통상의 뇌물죄 수사에 얽한 검찰이 권력형 특히 집권세력내의 권력형비리에 관한 한 수사의지와 열정이 의문시되어 왔다.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홍인길의원의 깃털론이 대두되고 나서 국민은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몸통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를 몸통과는 거리가 있는 깃털류의 일부 관련자만 선별 기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무마되었다.

기만할 수 없는 역사

권력형 부정부패는 통상의 권력기구로는 그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관계망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권력내부의 비리척결이 권력측근이 아닌 인사의 사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려운 이유는 권력내부의 치부와 자기모순을 드러내 놓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정기관인 검찰이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외면하고 작은 부정부패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사정기관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국민적인 외면을 받게 될 것이

다. 한보사건의 수사가 과거의 수사 사건 수사와 매우 유사하리만치 외압을 행사한 권력의 실체에의 접근에 실패하였다는 점은 대형부정부리의 재발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본다. 만약 수사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최고통치권자인 노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였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한보사태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보사태의 처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은 한보사건이 결코 중사결과를 몸통과는 거리가 있는 깃털류의 일부 관련자만 선별 기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무마되었다.

기업형 부정부패의 양상

이번 한보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여온 문민개척은 그야말로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 국가의 부패지수는 국민적인 의식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그

렇더라도 일단 한보특혜부정의 심각성에 비추어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함에도 밝혀낸 것이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기업형 부정부패의 양상을 조장할 뿐 아니라 공제적 로비행태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국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이다.

이번 한보사건은 권력형 부정부패이면서도 기업형 부정부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들이 특별로 대출받은 돈을 마구 뿌려대면서 권력실세, 국회의원과 정관계료들을 매수할 경우에 이른바 권력을 가진 이들은 부실한 조건을 갖춘 기업을 위해서도 권력을 남용하여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른바 기업형 부정부패는 공무원이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 국가의 부패지수는 국민적인 의식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그

뇌물을 많이 제공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가중처벌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결국에 가서는 몰염치한 기업가의 양산을 조장할 뿐 아니라 공제적 로비행태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국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이다.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국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이다.

특별검사도입 논의

전·노 두 전직대통령사건수사에 전기를 발췌한 대검중앙수사부가 한보비리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기법이 모자라거나 수사실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웃나라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록히드사건에 연루되었던 현직수사를 구축하면서까지 권력형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동경지검특수부를 우리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봐야 할 것인가. 특별검사도입 논의는 기존의 검찰기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

기이다.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검찰기구를 불신하고 특별검사에 도입논의가 대두된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검찰은 깊은 자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처럼 검찰이 통치권력과 유착된 나라도 매우 드물 것이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처리가 처음에 요란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과거의 전철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한보사태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인 납득수준에 못 미친채 사실상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심한 허탈감만 남겨놓았다. 한보수사에서 무용지대로 있었던, 정책적 과오를 범하거나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그 정책적 잘못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조치 등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역없는 수사 필요

악화된 경제를 파탄지경으로까지 몰고간 한보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행정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검찰은 수사종결로 사건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부실한 한보그룹에 특별 대출하도록 의압을 행사하였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에 대하여 지위와 신분을 불문하고 성역없이 엄정히 확대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를 축소수사로 보아 검찰수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론의 풍향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에 도입 등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보특혜대출의 실체인 몸통과 그 수족중에 관한 완성된 그림이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때에만 문민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과 사정이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PC
통신원

황장엽씨 망명, 냄새난다

한보수사 덮으려 망명사건 이용...근거없는 의심은 과잉반응

얼마전 북한에서 부총리급까지 지냈던 황장엽씨의 망명사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망명시기에 대해 아직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하이텔 통신게시판의 글들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황장엽씨가 정말로 순수하게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왔는지, 북한에서 권력투쟁에 밀려 도피한 것은 아닌지하는 의견과(ID: hmn135)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세울 수 없게되자 남한을 자신이 이상으로 삼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넘어왔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ID: our02)

이에 대하여 그가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내언론들이 서둘러 나팔 불듯이 보도한 것은 한보사태를 덮어버릴만한 빅뉴스로 키우기 위해서였을 것이고(ID: tico10) 대개의 망명기간은 길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국가에선 비밀로 부치는게 통설인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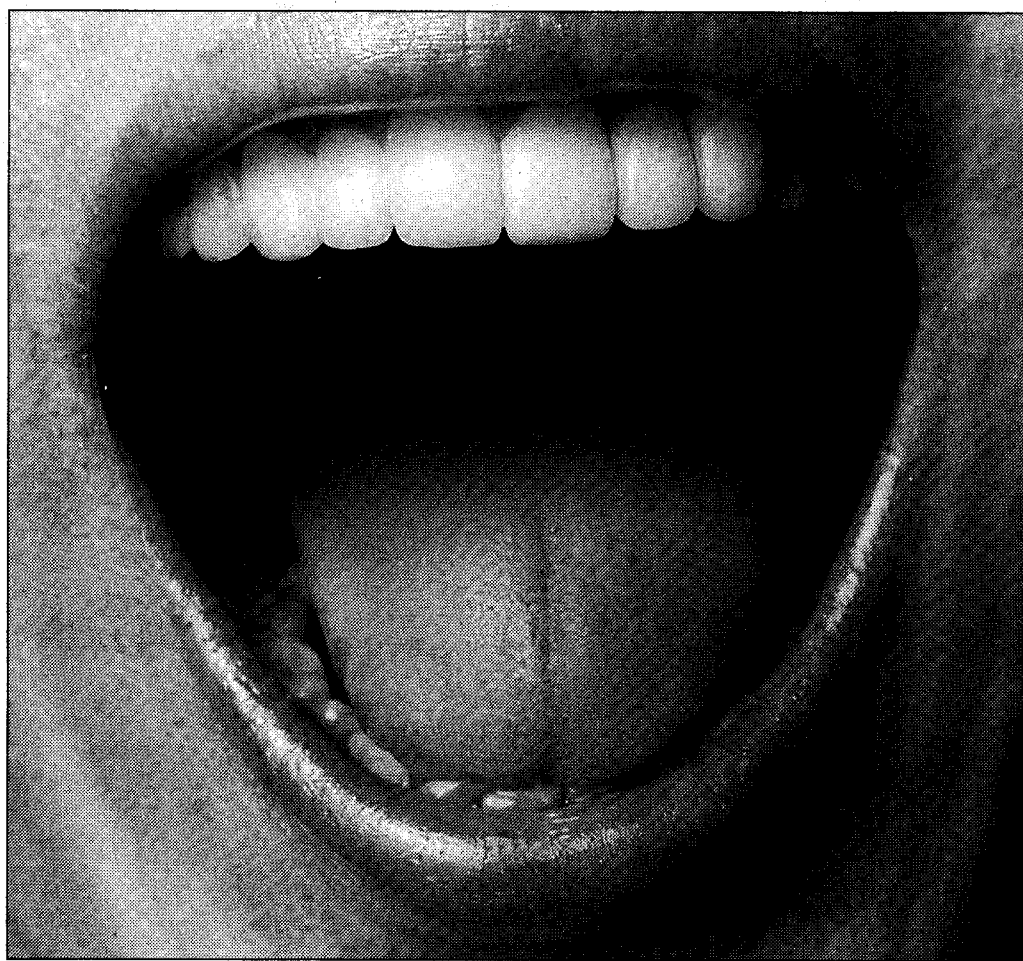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해버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보사태에 대해 정부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ID: super97)

그러나 언론이 안전 날치기 통과, 한보사태 등과 연관된 사건들을 축소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황장엽씨가 넘어온 것에 대한 보도까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ID: oneo07) 또한 망명을 둘러싸고 정부나 언론에 많은 의혹이 남기는 하지만 무조건 언론에 대한 불신풍조나 만드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그러한 의심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와 거짓을 말하는 언론과 어떻게 다를 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ID: HYDER)

전반적으로 PC통신에선 황장엽씨 망명과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아 통신원들은 이번 망명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최용섭 기자)

맛있는 세상, 오투기

실컷 드세요!



자~ 이제 맛껏 드세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않는 젊은 날의 도전과 먹을수록 감칠맛 나는 든든한 학문·가끔은 새롭고달콤한 사랑이라는 디저트도 필요하겠죠.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않는 담백한 우정에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한잔 술의 진한 맛도 젊은 날의 묘미겠죠. 무엇이든 할 줄 아는 것과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경험한 것과 하지못한 것에는 그 삶의 깊이가 다릅니다. 젊음이라는 그이름으로 대학이라는 맛있는 세상에 놓인 갖가지 먹거리들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실컷 드십시오!

대학이라는 맛있는 세상에 놓인 젊음의 먹거리들~ 실컷 드십시오!



주식회사 오투기
오투기는 맛있는 세상을 엮어냅니다